2017.2.27. No.5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TRADE BRIEF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기업경쟁력실
장 현 숙 연구위원 02-6000-5154, zestjang@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트럼프 정부가 선언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행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 시행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변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의 행적으로 보아 ① 파리협정 탈퇴, ②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③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의 폐지 등 친화석연료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리협정 탈퇴는 재임기간 내 어려운 상황이며, 청정에너지 지원정책도 의회 합의로 최장 2022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별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으로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01.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 기후정책 기조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첫 번째 핵심정책[1]으로 언급하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을 늘려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

- 미국 셰일 가스와 원유,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비용 감축 및 수입의존도 축소
-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2]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청정석탄기술 개발 및 석탄산업의 부흥을 공표

1) 트럼프 정부의 6대 핵심정책 :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일자리 창출과 성장정책(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미국 군사력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법질서 확립(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주요방침으로 2013년 6월 수립됨.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로 확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임

◉ 트럼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추진되어온 오바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화석연료 부흥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고용창출을 강조

-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오바마 정부가 불허한 송유관 건설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에너지·기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1] 내용

일시	행정조치	구분	주요내용
1/24	Construction of the Dakota Access Pipeline	대통령 각서	다코타 송유관[2] 사업재개 승인
1/24	Construction of the Keystone XL Pipeline	대통령 각서	키스톤 XL 송유관[3] 건설 승인
1/24	Construction of American Pipelines	대통령 각서	미국산 재료와 장비를 최대로 사용해 미국의 국경 내에 있는 모든 송유관 신규설비 확장 및 개보수에 대한 계획 수립 상무부에 180일 이내 계획서 제출 지시

주 : 1) 미대통령의 행정조치 종류로는 연방법원 제2조의 '행정권한의 허용' 조항에 근거해 의회 승인 없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행정명령에 비해 하위개념으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의지를 선언하고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가 있음
2) 다코타 송유관(Dakota Access Pipeline)은 일일 약 57만 배럴의 원유를 노스다코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수송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이 90% 이상이나 원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중단된 바 있음
3) 키스톤 XL 송유관(Keystone XL Pipeline)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원유를 미국 네브래스카주 스틸시티까지 수송하는 일일 약 80만 배럴 규모의 송유관으로 미국 멕시코 만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송유관과 연결될 예정으로 TransCanada사가 건설하고자 했으나,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승인 거부로 취소

자료 : 백악관(www.whitehouse.gov)

◉ 이러한 기조는 에너지·기후정책 관련 주요 인선으로 이어져 오바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 회의론자들이 대거 기용됨

에너지·기후 분야 트럼프의 내각 인선 현황

주요 부처	인선	성향
에너지장관 에너지 및 핵안보 정책 담당	 릭 페리(67세)	• 전 텍사스 주지사('00~'15), 원유 및 가스개발 확대 지원 • 다코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Energy Transfer Partners사의 이사 •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일자리, 에너지자원 가용성을 희생해서는 안된다"(1.19 인사청문회)
환경보호청장 환경관련 법안 수행 및 각종 규제 시행	 스콧 프루이트(49세)	•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출신으로 기후정책에 반대해 온 환경회의론자 •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정책저지를 위한 집단소송 주도 • 과도한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막는다고 비판 • "기후변화가 거짓은 아니나 면밀한 토론이 필요"(1.18 인사청문회)

(표 계속)

국무장관 기후변화협상, 에너지외교 수행	 렉스 틸러슨(65세)	•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 CEO(42년 근무) • 키스톤 송유관 건설 찬성 입장, TPP 찬성 • "기후변화는 실제 존재하나 그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고 대책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1.11 인사청문회)
내무장관 천연자원 보존 및 개발 업무, 국유지관리	 라이언 징크(56세)	• 하원 선거 당시 북미 에너지 독립 공약 • 화석에너지 옹호론자이며 환경규제 반대론자 •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정책에 비판적 입장 • 미 3대 셰일오일 유전지대의 하나인 바켄의 서부지역이 고향

자료 : 각종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02. 트럼프 에너지 · 기후 정책의 3대 핵심이슈와 전망

(1) 파리협정[3] 탈퇴 여부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이민정책, 국경장벽 설치 등 우려를 낳던 대선 공약들조차 이행[4]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파리협정 탈퇴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파리협정 탈퇴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협정 자체를 탈퇴하거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함으로써 파리협정까지 동반 탈퇴하는 것임

①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은 발효 3년 뒤('19.11.04)부터 탈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트럼프 재임기간 내 즉각적인 파급력을 불러오긴 힘든 상황

- 파리협정은 탈퇴서 제출 시점부터 1년 뒤에 탈퇴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어, 탈퇴를 추진하더라도 총 4년이 소요되므로 트럼프 재임 중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탈퇴를 진행하더라도 트럼프 재임기간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파리협정 비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파리협정에 의거 유엔에 제출한 미국의 "자발적 감축기여(INDC, 2015.3월 제출)"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5~28%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

3)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키로 한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 도출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협정 비준서에 서명한(2016.8.29) 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 11차 G20 정상회담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비준서를 제출하였음(2016.9.3)

4) 취임(1월20일)과 동시에 세제인하, 금융규제 강화법 폐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환경규제폐지, 반이민정책, 멕시코 국경에 장벽설치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만에 후보시절 공약한 주요 정책을 시행

참고 **파리협정 탈퇴관련 조항(제28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이 자신에 대해 발효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탈퇴 통보서에 이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당사국은 본 협정으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자료 : Paris Agreement(www.unfccc.int)

②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 취임 이후 보여준 트럼프의 강한 추진력을 보았을 때 이를 통한 파리협정 동반탈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 그러나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공화당 집권 시절이었던 2001년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을 때도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유지했던 것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동안 미국이 가졌던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리더쉽을 상실함과 동시에 신기후체제가 약화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중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양상과는 다른 형국으로 기후변화 국제관계가 형성될 공산이 큼

-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처보다는 대기질 개선과 같은 중국 국내 사정과 연계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중국은 WTO의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상품의 무관세화 취지보다는 품목별 무관세화에 따른 자국상품의 경쟁력 우려로 반대 입장을 취해 2016년말 최종 합의가 무산됨

●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관련 재원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높아, 국제기후재원 조성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2014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재원공여 회의에서 30억 달러를 공여키로 약속하고, GCF와 공여협정을 체결(2016.3.7.)한 이후 현재 10억 달러를 공여한 상태

  * (일본) 15억 달러, (영국) 12억 달러, (독일) 10억 달러, (프랑스) 10억 달러, (한국) 1억 달러 등 공여 약속

- 10억 달러 중 5억 달러는 올해 1월 17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공여한 것임

- 남은 20억 달러에 대한 공여는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향후 신기후체제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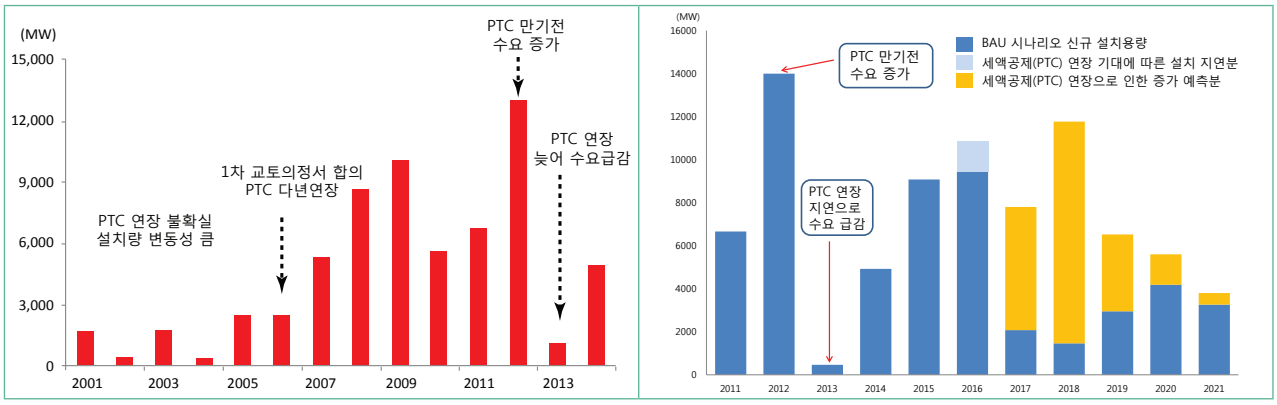
(2)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 가능성

◉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화석연료 경제기반의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의 州정부가 지원책을 유지[5]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의존형 시장으로 현재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역시 연방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정책에 크게 좌우

- 10년 동안 풍력에너지 생산 전력당 2.3센트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의 만기 도달시점마다 신규 프로젝트가 급격히 줄어듦

PTC 제도 변화와 미국 풍력 설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장현숙 외(2016), 신재생에너지 진출유망 국가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 그러나 2014년과 2016년 각각 폐지를 앞두고 있던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를 2019~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한 상태이므로,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PTC와 ITC의 공제율 및 폐지시기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PTC(풍력)	100%	80%	60%	40%	-	-	-	
ITC(상업용 태양광)	30%	30%	30%	30%	26%	22%	10%	10%
ITC(가정용 태양광)	30%	30%	30%	30%	26%	22%	0%	0%

자료 : EIA(2016.8),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를 참조하여 재구성

5) 에너지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허가와 관리통제권은 해당 주정부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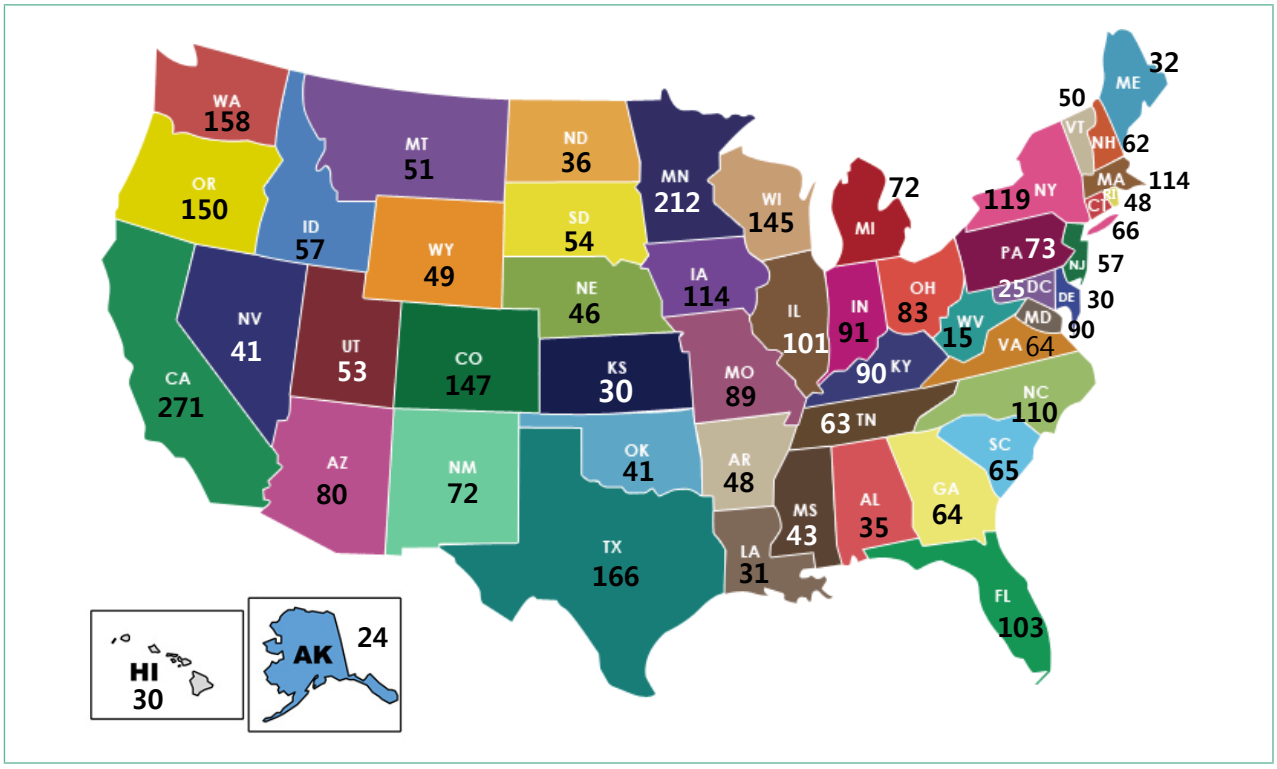
●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기조와 상관없이 현재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6] 등 약 4,000여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캘리포니아 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16.8)하고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17.1.20)

- 뉴욕 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정에너지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 개정안을 채택('16.8.1)

- 40%가 공화당 출신인 미국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 주지사연합(GWSC, Governors'Wind & Solar Energy Coalition)은 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개발 허가를 쉽게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제출('17.2)

미국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보유현황



자료 :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DSIRE)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 화석연료에 경제 기반을 둔 일부 주에서 지원정책이 중단되어 신재생 투자가 위축되거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6)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사례 **미국 와이오밍(Wyoming) 州 의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검토 중**

- '전력생산기준(Electricity Production Standard)' 법안은 와이오밍 州 전력회사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등 사전 승인된 자원 중 하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동법이 시행될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은 허용된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이용해 와이오밍 州에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10달러/MWh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 석탄 생산은 1970년대 이후 와이오밍 州의 가장 안정적인 세금 수입원으로 전력 수요는 와이오밍 州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와이오밍 州의 석탄 친화적 경제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됨

자료 : Forbes(2017.1.18.)

◉ 트럼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문건[7]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

●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총 1,375억 달러 규모의 50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4건이 포함

- 글로벌 최대 풍력발전 단지 건설 프로젝트, 풍력 송전망 투자,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저장장치와 송전망 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우선 리스트(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프로젝트명	지역	투자비용(억달러)	고용창출 효과(명)
1	풍력 송전망	Plains and Eastern Electric Transmission Lines	Oklahoma panhandle to Memphis, Tennessee	25	3,300(직접)
2	풍력 송전망	TransWest Express Transmission	California, Nevada, Arizona	30	3,000(직접) 4,000(간접)
3	풍력발전	Chokecherry and Sierra Madre Wind Energy/Wyoming	Wyoming	50	1,000(직접)
4	ESS	Energy Storage and Grid Modernization	California	Variable	Variable

자료 : Priority List Emergency & National Security Projects(2016.12.14.)

(3) 온실가스 배출규제 정책 후퇴

◉ 기후행동계획(CAP)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이 공표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7) 우선순위 목록 : 긴급·국가안보 프로젝트(Priority List: Emergency & National Security Projects)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3409546-Emergency-NatSec50Projects-121416-1-Reduced.html)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정책과 화석연료 규제 등을 포함한 CAP가 폐지될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에 총 9억톤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 공표한 INDC 목표('05년 대비 26~28% 감축) 달성이 어려울 전망

  * 오바마 정부의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 추진으로 미국은 2025년에 INDC 목표를 초과달성(31~35% 감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트럼프 정책이 이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여 2005년 대비 19~23% 줄이는 데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Clmate Analytics 외, KEMRI)

◉ 기후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2015년 8월 발표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도 철폐될 것으로 예상

- CPP는 2030년까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기 위해 주별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현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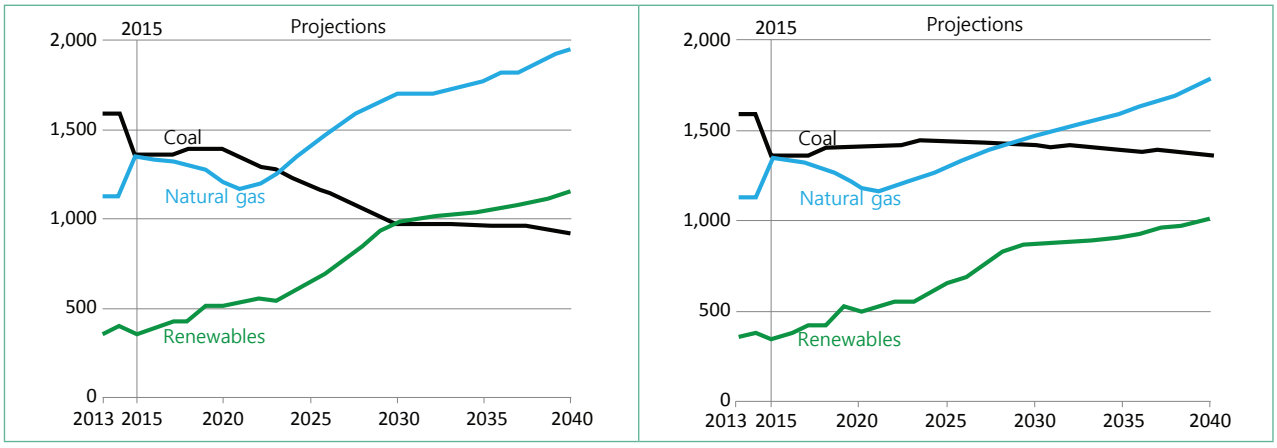
- 만약 CPP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CPP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될 것이며, 대법원까지 가서 CPP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실상 CPP는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하나 CPP가 폐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석탄화력 발전이 급등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 발전원가($/MWh, EIA, KEMRI) : 석탄 + CCS 144.4 〉 석탄 95.1 〉 천연가스 복합 75.2

CPP 제도 유(좌)무(우)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비교

(단위 : 10억 kWh)



자료 : EIA(2016.8),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

8)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에 대해 27개 주와 기업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승인으로 현재 시행 보류 중인 상태

03.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 해 온 에너지·기후 정책과 다른 친화석연료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와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비교

트럼프 정부[1]	분야	오바마 정부
•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 폐지 • 화석연료 규제 폐지	온실가스 규제	• 기후행동계획(CAP, '13.6) 수립 • 청정발전계획(CPP) 추진('15.8)
•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지원 불가	청정에너지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2배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연장
• 파리협정 탈퇴 • 지구온난화 부정 • 국제기후기금 재원공여 반대	국제협력	• 파리협정 합의('15.12) 및 비준('16.9) • 국제기후변화 대응 논의 주도 (미중 기후정상회담('14.11, '15.9) • 녹색기후기금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자금 지원
• 국내 석유 및 가스를 최대한 개발 • 석유 가스 개발 각종 규제 철폐	에너지개발	• 무분별한 원유가스 개발 반대, 환경성 강조 • 규제 및 기준 강화(수압파쇄공법 규제 등)

주 : 1)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트럼프의 공약내용과 공화당 정강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관련 내용 종합
자료 : Republican Platform 2016, America First Energy Plan(2017), KEMRI(2017)

◉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에 의해 에너지·기후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와 달리 명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 3대 핵심 이슈와 영향

에너지·기후정책	영 향
1. 파리협정	
• 파리협정 탈퇴	• 국제 기후변화 리더쉽 상실 → 국제사회에서 중국 역할 확대 • INDC 이행 미온적 국가 확대 → 신기후체제 약화 초래
• 기후재원 공여 취소	• GCF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국제사회가 목표하고 있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재원 조성 난항
2. 에너지 연료	
• 화석연료 규제 폐지	• 미국 내 석탄, 석유생산 증대 → 친화석연료로의 대대적 회귀는 어려울 전망 • 셰일가스 개발 확대 → 한국의 對美 에너지 수입 증대 가능
•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 美연방정부 지원정책 축소 영향 제한적 • 美주정부 지원책 유지 →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제한적
3. 온실가스 배출규제	
• 기후행동계획 폐지	• 미국 INDC 달성 불투명 → 국제 사회 비난 불가피
• 청정발전계획 취소	• (단기) 하향세였던 석탄발전량 추이가 현상 유지로 회귀 • (장기)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유지

◉ 미국의 에너지·기후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정책별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셰일가스 개발 등에 대응하여 철강, 자원개발, 기계 산업 등 관련 업종은 對美 수출 확대, 인프라 사업 참여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

미국 셰일가스 개발 참여 국내업체 사례

업체	광구명	참여지분(%)
석유공사	Eagle ford	23.7
한국LPG	Grant	20
AMKO	텍사스 Barnett shale	8.4
더커자산운용	Triana	14.7
더커자산운용	Marcellus	50

자료 : 셰일가스 폭풍, 중소기업 영향 있을까? (장현숙, 2013)을 참조하여 재구성

대미국 에너지 인프라 관련제품 수출액(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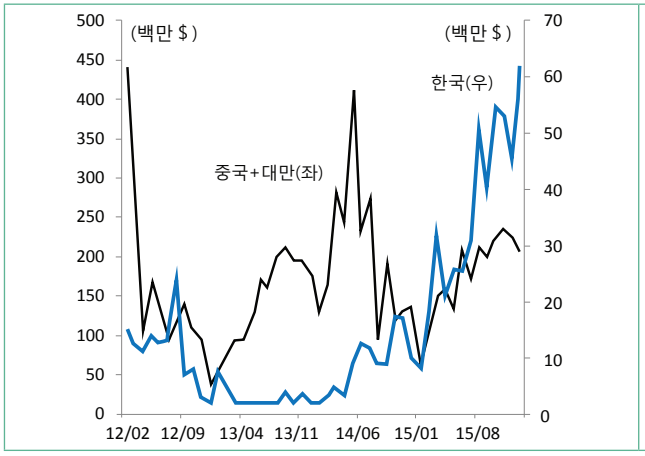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품목군	수출액	주요 세부품목
전자부품	4,567	반도체 3,352, 건전지 및 축전지 666
철강제품	3,158	철강관 800, 열연강판 434
기초산업기계	2,788	원동기 1,664, 공기조절기 773, 운반하역기계 155
산업기계	2,381	건설중장비 784
석유화학	1,780	합성수지 833
기계요소·공구	1,320	밸브 234, 전동축 205
계측제어기	413	계측기 170, 자동제어기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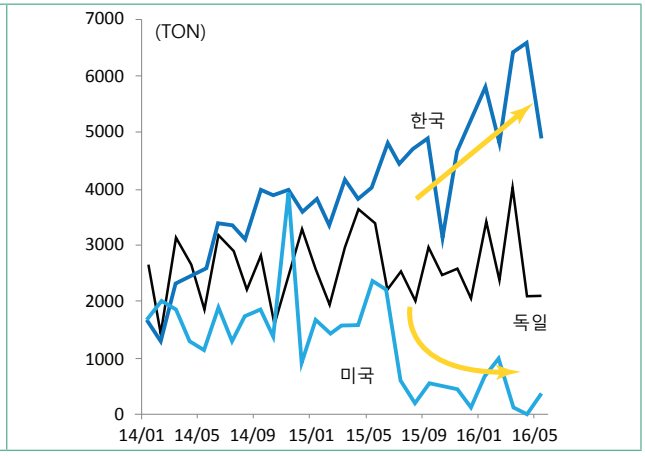
주 : MTI 2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압박이 국내 對美 수출품목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활용
  - ＊ 실제로 2015년 하반기 미국과 중국 간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무역 마찰 때문에 양국 시장에서 상대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 비중이 급감하면서 한국산으로 대체된 사례가 있었음

미국의 셀/패널 수입액 추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물량 추이



자료 :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장현숙(2016) 재인용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한미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적극 홍보하여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
  - ＊ 이미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20년간 매년 280만톤의 LNG 구매계약을 미국과 체결한 상태임

2017년 TRADE BRIEF 발간 목록

No.	일자	TRADE BRIEF 제호	작성자
1	01.16	해외바이어가 바라본 우리의 수출경쟁력 점검과 회복시점	강내영
2	02.13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본 외환시장 영향	조빛나/강내영
3	02.27	미국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	심혜정
4	03.02	중국 지방 양회(兩會)를 통해 본 2017년 중국 경제	박승혁/박진우
5	02.27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장현숙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층 http://iit.kita.net